

정부, 수출 부진 중소기업에 ‘4대 처방전’

— 中 전자상거래·내수시장 진출 돕고 무역보험 43조5천억으로 확대 —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부진 해소를 위한 긴급처방을 내놓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큰 비관세장벽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가하락,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수출업체와의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출 활성화 대책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수출 유망지역 마케팅 집중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무역보험 지원 확대 등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다.

우선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전자상거래·내수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 온라인 시장 공략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온라인 물 구축지원 확대 △중국 온라인 판매 전문기업-내수기업간 매칭 △알리바바·징둥 등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과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중국 수출 유망품목(5개 분야 101개 품목)에 대한 수출상담회, 중국 현지 대형 유통망과 연계한 판촉전 및 상담회 등을 올 상반기에 집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미국·아세안·중동 등 수출유망 지역에 대한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경기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개인소비 증대와 시설투자 확대에 대응해 대형 온·오프라인 쇼핑몰에 소비재 공급채널을 구축하고,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지 부품 소싱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한류 확산을 활용해 한류스타와 수출기업을 연계한 신제품을 공동 제작하는 마케팅 플랫폼을 도입하고, 국가별 한류지

수·유망품목 정보 등을 담은 한류 활용지도를 제작·보급한다. 이밖에도 호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성과 활용을 위해 진출 유망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상담회 및 사절단 파견 등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경우 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회를 개최하고, 이란 제재완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비관세장벽 대응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해 중국·아세안 등에 현지대응반을 구축하고,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및 해외지사 대행사업 확대 등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전문가 매칭을 통한 직접수출 지원, 전문무역상사 활성화를 통한 간접수출 확대 등을 추진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FTA 미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협정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요 10대 산업단지 등에 FTA 전문가를 파견해 FTA 활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금융지원도 가속화한다.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43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홍보활동을 강화기로 했다.